

# 농축산기자재 R&DB 기반구축 관련 법적 검토와 시사점

유찬주\*, 이미나\*\*  
\*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
\*\*(주)에코비즈  
e-mail:ycj@jbnu.ac.kr

## Legal Review and Implications for R&DB Foundation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Equipment & Materials

Chan-Ju Yu\*, Mi-Na Lee\*\*\*)  
\*Dept. of Agricultural Economics,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
\*\*Ecobiz Co. Ltd.

### 요약

농업분야의 디지털 뉴딜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이므로 국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,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,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. 이러한 디지털 뉴딜에 맞추어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농축산기자재에 대한 R&D와 연계한 민간연구단지 조성 계획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. 즉,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축산업에 필요한 농기계, 종자, 비료, 농약 등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지속성장되어야 한다. 따라서, 본 연구에서는 국가 농축산 기자재 R&DB 단지 조성을 위해 우선 그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 분석이 필수적이기에 이와 연관된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,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

### 1. 서론

농업분야의 디지털 뉴딜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 간접자본이므로 국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,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,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. 이러한 디지털 뉴딜에 맞추어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농축산기자재에 대한 R&D와 연계한 민간연구단지 조성 계획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.

농·축산 기자재 R&DB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국·내외 디지털 농업 R&DB 동향을 분석한 후, 그와 관련된 법·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규모의 경제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함이고, 둘째 융복합 기술적용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가치 제고이며, 셋째 농업과 환경을 고려한 첨단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거점 농·축산 기자재 R&DB 집적 네트워크 단지를 조성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농축산 기자재 R&DB 단지 조성을 위해 우선 그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 분석이 필수적이기에 이와 연관된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, 시사점을

도출하고자 한다.

### 2. 농축산기자재 R&DB단지 관련 법적 검토

농축산기자재 R&DB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농축산 기자재 관련 법령과 단지 조성에 따른 국토 개발계획 및 단지조성 관련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우선 농축산기자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자 한다. 그 이유는 농축산기자재의 관리와 규정을 검토한 후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단지에 포함시킬 기자재의 범위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농축산기자재는 스마트 농자재(센서 및 네트워크, 메카트로닉스, 태블릿 IT 기자재, 로봇기계, 인공지능 등)를 비롯하여, 종자와 종묘, 비료와 농약, 농기계 및 부착 기자재, 농업시설, 친환경자재, 축산기자재, 농업데이터 수집과 분석, 농업로봇 등을 포함한다.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자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며,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([표 1] 참조).

\*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(PJ016251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

[표 1] 농축산기자재 관련 법령 검토 내용

구분	관련 내용
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	- 농식품벤처·창업지원사업 추진 -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수집과 분석및보급 촉진 - 지자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시행 - 농림식품과학기술 기관·단체 및 산업체에 대해 기술역량진단 및 개선사업 추진
농약관리법	- 농약의 국내 제조 판매는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(유해성 등 13가지 조건 충족), 다만 천연식을 보호제는 시험성적서 면제 - 원제의 생산·판매는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(인화성 등 6가지 조건 충족) -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판매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 - 농약활용기자재의 생산·판매·수입의 경우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(인화성 등 9가지 조건 충족) - 위의 조건에 대한 시험기관의 지정운영 - 제조업자·원제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조절·유통질서유지 요청 - 허위광고 금지 -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기준과 교육 실시. 환경오염 방지 조치마련 -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농약정보 등 6가지) - 농약·원제의 검사 및 보관관리 보고
비료관리법	- 비료의 공급용 또는 사료용, 부산물비료 공급의 생산·수입 또는 판매는 적용 제외 - 다만 위의 경우 공정규격의 설정·변경·폐지 가능하고, 공정규격 미이행 제품의 판매금지 - 비료의 품질검사 실시 - 비료생산업자·수입업자·비료사용자의 약취/토양오염, 지하수오염,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금지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	-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, 관리감독 관련 타 법에 우선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 - 사업시행자의 일자리, 산업단지 관리운영,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성과평가 사업추진 가능 -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, 운영비 지원 가능 - 단지내 건축물, 세제상의 특례 적용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	- 공장, 지식산업, 문화산업, 정보통신산업, 재활용산업, 자원비축시설, 물류시설, 기타교육·연구·주거 복지시설 가능 -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심의, 지침 등 고시 - 일반산업단지는 사·도지사 지정/고시 - 일반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가능(에너지효율, 자금 및 세금감면 등 지정특례)
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	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립인가 - 조세지원, 국가연구사업 우선참여, 우선 구매
소재부품장비산업법	- 국가 및 지자체의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시책 마련 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규제 특례에 관해 타 법보다 우선 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기본계획수립·시행, 이를 위한 통계작성 및 관리 - 관련 조사·분석, 연구개발사업, 공동연구개발사업 시행 -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·기업·대학 및 단체 등과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국제협력 식책 마련
친환경농업 육성법	- 농업인은 화학자재 사용의 최소화 의무 등 환경친화적 농법 실천 - 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- 국가 및 지자체는 농약, 비료, 축산분뇨, 폐영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추진 - 농약·비료 등 투입자재의 사용실태 조사 - 유기농자재의 심의와 인증 공시 의무, 인증기관 지정 운영 - 농약관리법, 비료관리법의 신고 예외 규정 인정 - 친환경농업 정보, 교류, 연구 등 국제협력 적극 참여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	- 농약관리법, 비료관리법, 식품위생법, 사료관리법,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적용 제외
화학물질 관리법	- 농약관리법, 비료관리법, 사료관리법 등은 적용 제외

### 3. 농축산기자재 법령 검토에 따른 시사점

농축산기자재 R&DB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 이를 토대로 향후 단지조성에 따른 활용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.

[표 2] 농축산기자재 관련 법령 검토의 시사점

구분	시사점
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	- 농자재의 관련 산업단지 조성 추진시 적용 가능 - 중앙정부 보다는 전국의 경우 농업 관련 기관의 집적과 농도의 강점을 살려 지자체의 사업추진이 필요
농약관리법	- 농약등록에 따른 조건 충족을 위한 검증 비용 - 식약처 등록된 수확후 약제의 농약등록 사용 - 농약·원제의 안전사용관리와 관리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
비료관리법	- 비료의 환경오염 금지 항목이 있음에도 비료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은 없음. 이에 대한 규정 필요)친환경농업육성법에 도 실태조사 의무규정 있음)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	- 농자재 관련 단지조성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·운영할 경우 각종 지원 및 특례적용 가능
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	- 각 농자재별로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- 기 설립된 농자재 조합과의 공동연구 개발사업 추진
소재부품장비산업법	- 주요 농자재 수입 및 수출국과의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개발 사업 추진 - 기업 및 대학과의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공동연구 사업추진
친환경농업 육성법	- 축산분뇨에 대한 농자재 품질인증과 관리, 오염정도에 대한 관리시스템 필요 - 농약과 비료의 정보와 사용실태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 - 친환경농업 관련 국제협력 공동 연구 및 교류협력 추진 - 친환경 농자재의 신고 제외 대상 품목에 대한 정보와 사용실태 공시 필요

### 4. 결론

농업부문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, 디지털시대로의 전환,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, 한편으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농축산기자재의 수요는 향후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.

그러나 현재 농축산기자재 산업은 R&D투자와 기술개발, 농자재 수입증가, 디지털로의 전환 등 현실적 문제점에 봉착해 있으며, 이는 농축산기자재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. 따라서 국내 농축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농축산기자재 R&DB 단지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자재 산업육성의 기반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.

#### 참고문헌

- [1]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집, <https://www.mafra.go.kr/mafra>
- [2] 농촌진흥청, “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”, 2018년

- [3] 서대석, “영농 자재의 저투입 및 대체재 개발 현황과 과제”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pp.31-45, 2016년
- [4] 성재훈, “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”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pp.15-30, 2020년
- [5] 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, “한국농업기계진흥원 설립타당성 연구”, 농림축산식품부, pp.17-24, 2020년